

## 02 과학벨트 입지선정 과정과 문제점

# 정치적 난항 딛고 사업 본격 추진.. 역차별 · 예산집행 등 후유증 우려

글 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

▶▶ 중이온가속기 조감도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발효된 지난 4월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저명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과학벨트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말문을 열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브리핑실은 뒷자리까지 취재기자들로 꽉 차 발디딜 틈이 없었다. 2년여를 끌어왔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 일단락되는 자리라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 ‘은하도시’에서 출발, 과학문화경제도시 꿈 꿔

참으로 긴 2년이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한 때가 2009년 1월 13일이니, 정확히 2년 4개월이다. ‘원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더 한참 전이다. 과학벨트의 씨앗은 2005년 민동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를 중심으로 과학·예술·인문학 교수들이 결성한 ‘랑콩트르(만남)’ 모임이다. 당시 이들은 세계 일류 과학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며 연구하는,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공간을 제안했다.

이 구상은 2006년 4월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서울 시장에게 ‘은하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보고 됐고, 학자들의 꿈이었던 은하도시는 그때부터 정치색을 띠기 시작했다. 랑콩트르는 그해 9월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은하도시 포럼’이라는 사단법인으로 확대됐다.

은하도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바뀐 건 2007년 8월 이명박 후보가 경선을 통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된 뒤였다. 한나라당은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과학기술 분야 대표 공약으로 과학벨트를 확정했고, 그때부터 은하도시는 과학벨트가 됐다. 과학벨트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가 내세운 3대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과학문화도시’였던 은하도시가 비즈니스 개념이 들어간 과학벨트로 변신한 데는 이 대통령의 의지

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기초과학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발전하려면 '과학비즈니스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과학벨트 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07년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됐으며, 정부 출범 뒤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팀이 설치됐다. 2008년 10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과학벨트 추진지원단을 만들고 연말까지 14회에 걸쳐 관련 토론회, 정부출연연구소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드디어 2009년 1월 과학벨트 추진지원단이 제출한 과학벨트 종합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정부는 2월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세종시 수정안 핵심으로 떠올라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과학벨트 사업에 제동이 걸린 건 그 다음부터였다.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3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열리지 못해 과학벨트 특별법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될 기회가 있었지만 불발됐다.

6월에 정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여야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한나라당은 '30대 긴급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 중 과학벨트 특별법을 미래준비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면서 통과 의지를 보였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당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직접 만나 "과학벨트 특별법이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법안인 만큼 정치적 논리와 분리시켜 생각해 달라"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 특별법 자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르진 않은데, 야당이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과학벨트 특별법을 일종의 정치적 '볼보'로 잡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즈음 과학벨트 특별법이 2009년 안에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9월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 등 핵심사안들이 포진해 있어 과학벨트 특별법은 현안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과학벨트 특별법 '백지화' 가능성까지 나왔다.

하지만 2009년 9월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잠자고 있던 과학벨트 특별법은 다시 한 번 '비상'의 기회를 맞게 됐다. 당시 정 총리는 "세종시 조성이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비효율성이 크고 도시 자족성이 부족하다"면서 과학벨트를 세종시 수정안 중 하나로 거론했다.

정 총리의 발표 이후 그때까지 시큰둥해하던 정치권도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세종시가 자족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과학벨트만한 사업이 없다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야권은 세종시의 원안 추구를 주장하며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지만 과학벨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통과

2010년 1월 11일 정부는 결국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수정안의 핵심이 과학벨트였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설립하고 기초 원천기술을 개발해 신산업까지 창출하는 아시

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김종현 교과부 제2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2015년까지 3조5천억 원을 투자해 세종시에 총 330만㎡ 규모로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조성할 것”이라며 “과학벨트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금융 기능을 융합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그림은 확 달라졌다. 세종시 원안의 중심이었던 중앙행정기능은 사라지고 주거용 기능 규모도 대폭 줄었다. 대신 원안에는 미미한 정도에 그쳤던 과학연구 및 대학, 첨단녹색산업 기능이 확 늘었다. 원안에 없던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모두 ‘정부 기능 및 아파트 중심의 행정도시’에서 ‘기업 교육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세종시의 ‘컨셉’을 바꿨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학벨트의 ‘장밋빛 꿈’도 잠깐이었다. 과학벨트가 세종시 대안으로 공식화되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종시 수정안과 한데 묶이면서 정치권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지 6개월 뒤인 2010년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고, 결국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는데 반대가 164명이었다. 찬성은 105명, 기권은 6명이었다.

정운찬 총리는 다음날인 30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취지대로 세종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원안대로면 행정기능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을 양심이 허락치 않았다”고 밝힌 정 총리도 표결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과학벨트는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수순을 밟았다. 교과부는 과학벨트를 세종시와 분리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이번엔 과학벨트 입지가 문제였다. 과학벨트의 입지가 세종시로 결정된 상황을 한 차례 경험한 뒤라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여야간 대립은 극에 치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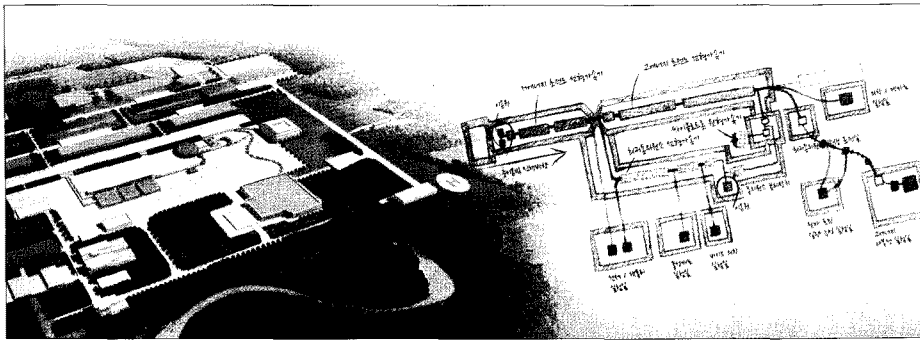
여당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행정기관 이외에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자유선진당은 과학벨트 입지를 세종시(또는 충청권)로 못 박아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맞서 왔다. 이로 인해 교과부 내에서는 2011년 상반기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과학벨트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됐다. 과학벨트가 또 한 차례 공중분해 위기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과학벨트 특별법은 2010년 12월 8일 국회의 ‘벽’을 넘는 데 성공했다. 국회는 이날 의장의 권한으로 과학벨트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 입지선정 끝났지만 지역 갈등 유발

이후 과학벨트 사업은 착착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TV 신년 특별연설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4월 과학벨트 특별법이 발효되고, 40여일 만인 5월 16일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등 입지가 선정됐다.

최종 확정된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들여다보면 ‘기초과학을 토대로 원천기술과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창조적 지식 기반 환경을 만들겠다’는 당초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구도로 짜여 있다. 5월 16일 발표된 과학벨트 확정안에 따르면 과학벨트는 대전(신동·둔곡지구)을 과학벨트 거점으로 하되 대구·경북과 광주 등에 ‘연합캠퍼스’를 만들어 연구 기능을 분산시킨다. 또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사업화 등을 수행할 기능지구는 대전에서 40km 이내에 위치한 청원(오송·오창), 연기(세종시), 천안 등 세 지역이 선정됐다.



하지만 과학벨트는 최종 입지를 공식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대전 확정설'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과학벨트 사업은 마지막까지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흠집이 나며 잡음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가 선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라는 민간 전문 위

원회를 구성해 입지 후보지를 평가·선정했지만 대전 확정설은 정치권에서 먼저 터져 나왔고 결국 벨트위원회는 '들러리'를 썼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5월 16일 확정안 발표 당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교과부와 과학벨트위원회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해 왔다"면서 "사전에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 내정설'은 지자체들의 반발도 불러왔다. 과학벨트 유치에 가장 열심히 뛰어 들었던 광주시는 선정 결과에 불복했다.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5월 25일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위법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정부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거점지구 최소 기준 면적이 당초 330만㎡(약 100만 평)에서 165만㎡(약 50만 평)로 축소된 점, 심사 5개 항목마다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된 점, 지반 및 재해안정성을 점수화하지 않고 적격, 부적격으로만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재심사를 요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이 경북에서 가동 중이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도 경북에 짓고 있는데도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데 섭섭함을 드러냈다.

### 예산 집행 현실성 있나 우려도

향후 과학벨트 사업의 추진에서 예산 집행의 현실성도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3조5천억 원이었던 과학벨트 전체 예산은 확정안에서 5조2천억 원으로 1조7천억 원이 늘었다.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인재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데는 환영하나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과학기술계는 기초과학 예산이 늘어났다는 점을 반기면서도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분 전체가 과학벨트에 투입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기초과학 연구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학벨트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훨씬 많을 텐데 과학벨트 때문에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곳을 선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과학벨트를 여러 곳에 '나뉘'주면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 영남, 호남은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만족시키려다 보니 국민 세금을 쏟아 붓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기초과학 육성이란 당초 목적은 뒷전으로 밀린 채 지역별 과학예산 갈라먹기 싸움판이 돼버리면서 지역갈등 증폭 등 후유증만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과학벨트 사업 후반기인 2014~2017년에는 무려 3조9천700억 원의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는 등의 변동에도 이 예산 계획이 살아남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과학벨트는 세계적인 석학과 인재가 모이는 장소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벨트를 통해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와서 한번 살아 보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은하도시를 꿈꿨던 5년 전 학자들의 소망 그대로 말이다.